



## 지역과학기술진흥, 중앙과 지역의 협력으로 실현하자

2013년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에 큰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해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향후 5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 시작되는 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 지자체와 협력하는 정책으로 전환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 이후 지역R&D 투자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R&D 투자가 대부분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최근 지역R&D 투자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지역에서 자체R&D 투자보다는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근간에 지역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중앙정부에만 맡길 수 없으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에서도 자체R&D 투자를 통해 지역이 필요한 과학기술을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하겠다.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R&D 사업은 전

국적으로 획일적인 사업을 기획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우려를 가져왔다. 예를 들면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분야를 선정한다고 하지만, 어떤 기술분야에 있어서 투자대비 연구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임계규모를 갖추지 못한 채 전국에 다수의 기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지역R&D를 위한 수요조사 시 지역들이 전통적으로 강한 주력산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분야가 아닌 중앙정부 R&D사업 유치를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의도하는 첨단기술분야를 제안한데 그 원인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국가R&D 자금이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중앙정부가 지역R&D 사업을 추진할 때 지자체에 대응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도 사업의 운영과 평가에는 배제시켜 지자체의 의견이 사업에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다. 최근 지자체들은 지속되는 세수감소로 재정악화가 심화되어 지역에서 꼭 필요한 자체R&D 사업을 추진할 예산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가의 지역R&D 사업은 꼭 필요하지만 지자체의 참여를 확대하여 진정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글 이연희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전략기획실장  
lyhee@gstep.re.kr

글쓴이는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경영대학에서 마케팅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주)LG CNS 기술연구부문, 포스텍 기술경영대학원과정 등에서 근무했다. 지역과학기술정책, 서비스혁신 등에 관심을 두고 현재는 경기도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연구와 기획업무를 맡고 있다.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 시급

이제 중앙정부는 지역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짧은 자치행정의 역사 속에서 지자체가 지역의 과학기술정책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역량이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우려가 지난 10여 년 동안 지역R&D 사업을 추진하면서 겪은 시행착오 속에서 나온 것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역도 변하고 있다.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지자체장의 최우선 과제로 부각되면서 지역 내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중앙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인 R&D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2010년 기준으로 국가R&D 규모에 비해 지자체의 자체R&D 투자 비중이 미미한 수준(약 11%, 1조4천억 원)이기는 하지만 지자체가 지역 내 과학기술진흥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기초·원천·미래 과학기술은 국가의 몫이지만 지역R&D 사업은 지역의 산업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우리나라가 보다 선진적인 지역과학기술 진흥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강력한 중앙집권체제 하에서는 국가의 과학기술 진흥이 모두 중앙정부의 몫이었으나 분권화가 강화될수록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세계적인 강소기업이 많기로 유명한 독일에서는 연방정부가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금융, 법·제도 및 직업교육 등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책을 담당하고 주 정부가 지역의 중소기업 혁신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는 등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고 있다.

독일과 한국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국가 과학기술진흥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즉 기초·원천·미래 과학기술은 중앙정부가 맡고 지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산·학·연 협력, 지역 과학기술 인력양성 및 과학문화 확산은 지자체가 추진하는 방식으로 단계별 전환이 요구된다.

### 중앙정부에 지역과학기술 전담조직 신설 필요

지자체에서는 지역과학기술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를 제정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자체R&D 사업에 대한 노력을 쏟고 있는데 반해 중앙정부의 지역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관심과 추진의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중앙정부에 지역과학기술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이 존재하지 않아 누구를 대상으로 지역R&D 정책을 논해야 할지 막막한 현실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가 존재하나 그 기능과 역할이 유명무실하며 과학기술정책국에서 일부 담당하고는 있지만 '지역과학기술을 진흥'하는 시대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세종시를 포함하여 전국 17개의 광역지자체에 지역과학기술의 활발한 진흥을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 내에 일정 규모의 지역과학기술전담조직을 신설해야 한다. 그리고 이 조직이 지역과학기술정책을 선도하며 광역지자체와의 협력을 주도해야 한다.

### 과학기술관련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

우리나라의 세입구조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약 80:20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광역지자체의 주요 세입원인 부동산 거래세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반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무상교육 및 복지정책의 지자체 의무분담금은 날로 증가하여 지방재정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자체들이 지역의 미래를 굽아먹는 일임을 알면서도 당장 눈에 띄지 않는 과학기술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현실을 파악하고 지자체가 지역R&D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꾸준히 논의되어 온 과학기술관련 포괄보조금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하여 지역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R&D 사업을 기획·운영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본 사업의 관리감독의 역할을 맡는 것이다. 더 나아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의 자체R&D 추진을 위한 예산규모에 대해 가이드라인(예를 들면 지자체 예산의 2~3% 수준)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는 지자체에는 국가 대형R&D 사업을 유치할 때 가산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지자체의 자체R&D 투자를 독려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